

이혜훈 청문회 앉지도 못하고… 자료제출 부실 이유로 파행

재경위원장, 후보자 배석 허용 안해
국힘 “성실한 자료 제출, 개최 조건”
민주 “검증 위해 조속히 실시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9일 예정됐으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입장도 못하며 파행 수순을 밟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위원들은 이 후보자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은 이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이 청문회 개최의 ‘조건’이었다고 맞섰다.

재경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 여부를 두고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한 후 정회를 선포했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이혜훈 후보자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고 여야 위원들의 의사전행 발언을 청취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을 두둔하거나 방어할 생각은 없다.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는 이 장관의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다 정회됐다. /뉴시스

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법무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된다.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해야 한다. 국회는 청문회법에 따른 인사 검증의 책무가 있다. 국민, 주권자가 거기에 따라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

혹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하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싶다. 후보자가 소명을 못하면 청문회 문턱을 못 넘는 것인데, 청문회장 자체를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의혹이 해명이 될까봐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지난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한 전체회의의 속기록에 1월19일에 양당 간사 간 청문회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여당 간사가 노력해서 청문회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양해가 된 것”이라며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면 청문회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놨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는 단순한 의혹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정부, 은행 등 공식 기관의 문서로 필요하다. 자료 요구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안전을 의결한 것도 그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히 오지 않으면 청문회를 연기하겠다고 한 바 있다. 청문회 7일 전까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해야 해서 20일에 열어야 하지만 여당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오늘 한 것이다. 15일 오후 5시까지 제출된 자료는 전체의 15%”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청한 자료가 대부분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 그리고 대상자가 아니라 자녀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서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출 받아서 청문회를 계속했던 것이 다른 상임위의 예였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3번을 공천 받아서 서초구민이 확인한 인사”라며 “그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장관 후보자로 제정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려있게 고민해달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당연히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는 궁극적으로 열려야 한다”며 “청문회가 하려면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해야 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많고 낙마를 해도 10번, 100번을 낙마했어야 하는 이 후보자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세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임이자 위원장은 “청문회를 오늘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일정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 양당 간사가 합의해 오면 속개할 것”이라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에서 청문회 개최를 기다리던 이혜훈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갖고 있거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야당이 자료를 15%만 제출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과장이다. 75% 정도 제출했다.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냈고 지금 최대한 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주, ‘당원 1인1표제’ 내달 중앙위에 부의

22~24일 당원 의견 수렴
최고위서 대립각 세우기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당원 1인1표제’ 안건을 의결하고 다음달 2일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부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1표제 개정 등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의결됐다”며 “서면으로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청래 당 대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이 ‘20:1’인 것을 ‘1:1’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중앙위에서 1인1표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중앙위 소집 후 2월2일 오전 10시부

터 2월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거쳐 해당 당헌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이달 22~24일에는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지난 12월 5일 중앙위 표결에서도 1인1표제가 부의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투표자의 72.65%가 찬성했지만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된 바 있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최고위에선 1인1표제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최고위원과, 이미 총의가 모아졌다는 최고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황병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가 시대정신이며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이라면서 “오랫동안 아래 갯근을 고쳐매지 않았던 선비의 지혜처럼 오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 1인1표제 부결의 의미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원칙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당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물을 개정한 당사자가 그 다음에 바로 선출되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당성과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1인1표제의) 적용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적용 시점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 결론을 당이 공개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당원주권 정당 실현이란 원칙을 갖고 1인1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압도적인 당원들의 찬성으로 대표가 됐다”며 “이후 1인1표제 추진 과정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 여러 문제가 나왔다.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보완책을 마련했다. 높은 투표율에도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4~5명의 후보들은 전적으로 당원 1인1표제에 찬성했다. 그것이라면 총의가 모아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박태홍 기자

장동혁 단식 5일째 “첫 각오 꺾지않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단식을 5일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 요구한 쌍특검과 단독 영수회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장 대표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 5일째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다. 힘이 든다”며 “점차 한계가 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달라”고 부연했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야당 대표가 오죽했으면 곡기를 끊고 단식을 하겠냐”라며 “장 대표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했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사실 지난번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상당 부분 의견 교환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수사를 지시했고, 민주당에서는 통일교에 신천지까지 합쳐서 야당 표적 수사용 특검 법안을 내면서 사실상 특검 도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정 그렇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 제안을 했다.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게이트 수사에 집중을 하고, 필요하다면 신천지는 별도 특검으로 하자고 하는 우리 당의 제안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첨단제조업·미래기술 파트너십 강화

19년 만에 伊 총리 방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9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제조업과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 총리가 양자 회담을 위해 방한한 것은 19년 만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방한하는 첫 유럽 정상이기도 하다.

이날 양 정상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의

성과를 평가하며, 양국 경제의 강점과 상호 보완성을 활용해 제3국 시장에서의 교역과 투자도 증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반도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민간 간 반도체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이탈리아 기업·메이 드인이탈리아부 간 산업협력 양해각서와 한국이 의장직을 수임 중인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의 틀 내에서 유

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논의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서 ‘전략대화’를 강화하기로 하고 차기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협력의 주요 목표를 식별하기 위한 ‘2026-2030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2007년 체결된 과학기술 협력협정을 토대로 공동연구와 인적 교류를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정상은 물리학, 양자과학, 첨단소재 및 나노기술, 문화유산 점목 AI 등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의 8건의 공동연구가 착수된 점을 평가하고,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정과 공동 프로그램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4-2025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영화, 박물관, 공연예술, 건축, 관광 등 분야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합동계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서예진 기자 syj@